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본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전말

“모든 현장 김회장 나타나 직접 폭행”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담동~상차동~북창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폭행현장에 김 회장이 나타나 직접 폭행했다”는 피해자 6명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3월 8일의 사건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폭력 가담·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북창동에서 화해를 주선했을 뿐 다른 곳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사건 발단=3월 8일 오전 7시께 서울 청담동 소재 G7라오오펀에서 김 회장의 차남 김 모(23)씨 일행 2명이 북창동 소재 S3클럽 종업원 조모(33)씨 등 5명과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동료 3명과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진 데 이어 S3클럽 종업원 윤모씨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았다.

◇G7라오오펀 기해자 소집=S3클럽 영업이사 조씨 등 4명은 G7라오오펀 사장으로부터 “한화그룹 회장 아들이 맞아 머리가 찢어졌으니 와서 사과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G7라오오펀로 갔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김승연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가 조씨가 “내가 그랬다”고 말하자 대가 주어진 승합차 1대와 벤츠, 에쿠스 등 승용차 4대에 조씨 등 4명을 태우고 함께 이동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청계산서 쇠파이프 폭행=김 회장은 오후 9시께 인적이 드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차동 소재 빌라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조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길이 15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등 부위를 1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해 늑골골절의 증, 두부부박상 등을 입었다. 폭행 당시 김승연 회장은 점퍼 차림이었으며 발 2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가죽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때 김 회장 차남이 “조씨는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회장 일행은 북창동 S3클럽으로 이동했다.



피해자 “청계산~북창동 연이은 폭행” 진술 김회장 전면 부인...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북창동으로 이어진 보복 폭행=김 회장은 오후 11시께 S3클럽에 도착한 뒤 업무 조모씨에게 “아들을 때린 윤씨를 찾아오라”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업무가 머뭇거리자 뺨과 목 등을 3차례 때리며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현장에 있던 경호원 등도 김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거들었다.

김 회장은 업소측이 윤씨를 데려오자 아들에게 “너를 때린 사람 맞느냐”라고 묻은 뒤 아들이 “맞다”고 하자 아들에게 가죽장갑을 남기며 “너도 잠깐 끼고 때려라”라고 지시했다.

◇김회장 범행소사 상황=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승연 회장은 진술 과정에서 거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회장은 3월 8일 밤 북창동 S3클럽에 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폭행 가담 또는 지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출석 전 ‘수사 작극 협조’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피의자 대질신문 요청을 조사 막판까지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경찰의 속을 태웠다.

경찰은 다른 조사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모니터 화면을 통해 김 회장의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 진술을 받는 ‘선면(選面)조사’를 벌여 “때린 사람이 김 회장이 맞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범행 조사를 받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청은 “미확인 첩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해당 범죄정보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그 아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청은 남대문서의 초기수사가 지연된 까닭에 대해 “사건관계자들의 범죄사실 부인 및 진술거부 등 수사 비협조로 어려움이 많았다. 진술 확보, 차량 및 관련자 특정 등 기초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외압 여부 등 수사 진행상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청 보충 검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교부 홈페이지 공개 ‘2007년 공동주택 가격’

봉선동 포스코 19% 뛰어 광주·전남 전반적 보합세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수도권 주택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반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 시·도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7.7%, 9.1%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 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이 총 17가구에 그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7년 공동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은 광주 남구와 서구 등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올랐을 뿐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사실상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

광주 동구의 경우 계림동 금호타운 26평형의 공시가격이 9천700만원으로 지난해(8천400만원)보다 15%(1천300만원) 올랐다. 세 부담은 지난해(19만2천원)보다 3만9천원 가량 늘었다.

전남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 상승하면서 광주의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는 그동안 전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다 지난해부터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순천 연향동 현대아파트 20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4천200만원으로 지난해(3천900만원)보다 7.6%(300만원)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는 올해 6만6천원으로, 지난해(5만8천500원)보다 7천500원 소폭 늘어났다.

일부 인기 단지 제외 세금 부담 작년 수준

그러나 일부 인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남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봉선동 포스코더샵 33평형(기준층)의 공시가격은 2억900만원으로 지난해(1억7천600만원)보다 19%(3천300만원)나 뛰었다. 이에 따라 이 가구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62만원에서 올해 78만5천원으로 16만5천원가량 늘게 됐다.

지난해까지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50평형은 지난해 2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2억7천200만원으로 3%(800만원) 올라 유

망세가 한층 꺾였다. 해당 가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106만원에서 110만원으로 4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목포의 경우 산정동 라인아파트 18평이 2천600만원으로 지난해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3만9천원의 재산세를 그대로 내게 된다.

아파트도 광주·전남은 단독주택 상승률이 각각 1.73%, 2.7%로 전국 평균(6.22%)을 크게 밑돈 데다 6억원 이상 주택이 각각 14가구, 3가구에 집계되는 등 ‘세금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대를 합산할 경우 올해 광주·전남의 중부세 납세 대상은 총 1천9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중부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재산세 상한선이 적용되는 데다 중부세 과표 적용도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한층 꺾였다. 해당 가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106만원에서 110만원으로 4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최경원기자 choice@kwangju.co.kr

“미확인 첩보...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서울경찰청 능자 수사 의혹 해명 “외압 의혹 등 검찰 통해 밝힐 것”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경찰이 능자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낸 ‘한화 회장 범죄정보 처리 관련 해명자료’에서 “수사를 초기부터 제대로 신속히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 첩보 접수, 보고, 지시 하달 경위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3월 8일 발생한 이번 사건 첩보를 같은 달 26일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가 제출한 것이 이번 사건 내사의 시초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고받은 한기민 형사과장은 이를 남대문서로 이첩 조사토록 결정하고 내용을 흥영기 서울청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뒤 이를 뒤 남대문서로 하달했다고 서울청은 밝혔다.

흥 서울청장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한 과정에서 지시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단순첩보 내용은 경찰청장 지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서울청은 덧붙였다.

첩보를 직접 내사·수사하지 않고 남대문서로 하달한 이유와 이 첩보가 경찰청 본청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청은 “미확인 첩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해당 범죄정보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그 아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청은 남대문서의 초기수사가 지연된 까닭에 대해 “사건관계자들의 범죄사실 부인 및 진술거부 등 수사 비협조로 어려움이 많았다. 진술 확보, 차량 및 관련자 특정 등 기초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외압 여부 등 수사 진행상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찰청 보충 검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예측 “문화수도 계획안 전면 수정해야”

광주에 중화문화수도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위원장 최규철)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관광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으로는 진정한 문화수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없다”며 “형식적인 수정이 아닌,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에 중화문화수도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위원장 최규철)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관광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으로는 진정한 문화수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없다”며 “형식적인 수정이 아닌,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금까지 3천200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

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광주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문화전당 랜드마크 강화를 위한 대표적 지상 건축물 구축 ▲세계적인 작가 명차 컬렉션 유치 국제 규모 미술관 건립 ▲초대형 규모 최첨단 전문 공연장 건립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광주 예술인 동반 참여 등 4개항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Europe, and various domestic destina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